









2 0 1 2

2012 외교백서

DIPLOMATIC

W H I T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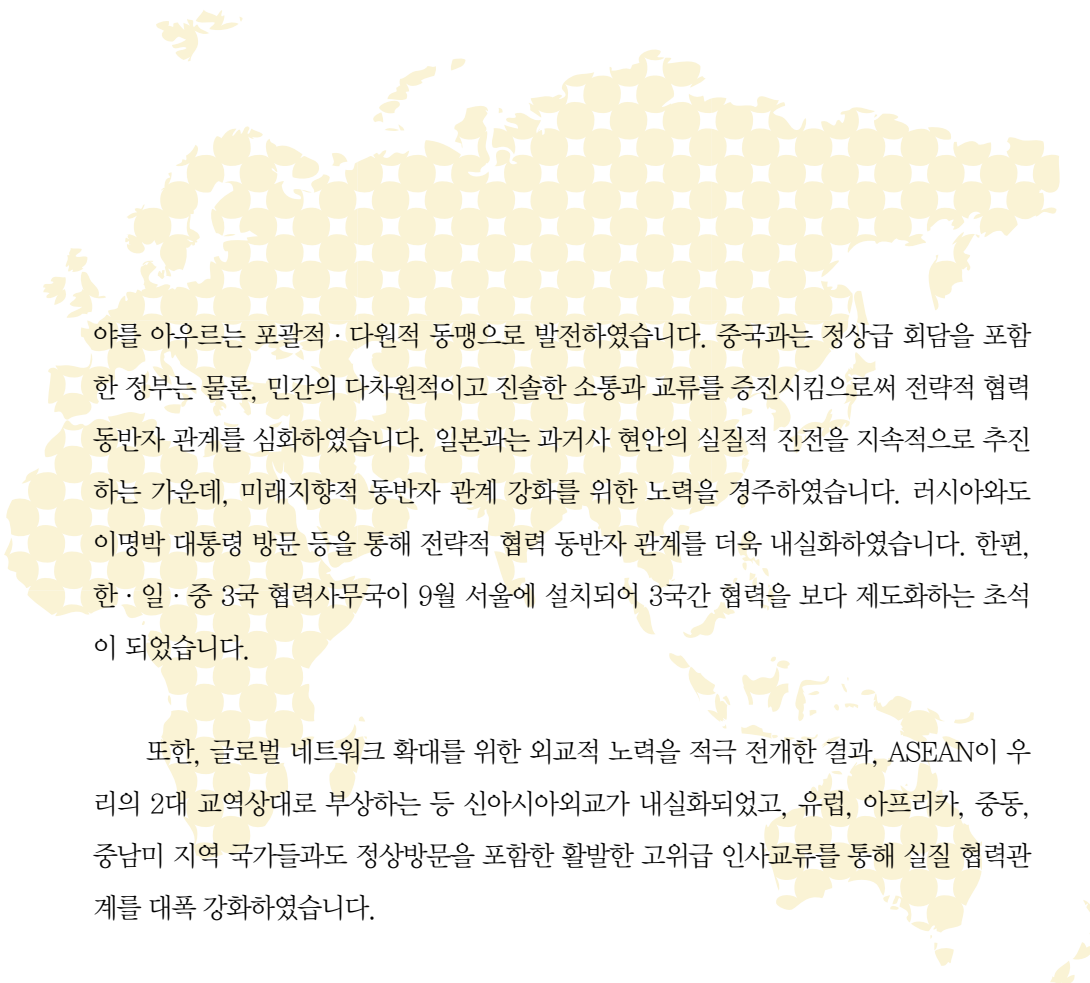
P A P E R



2011년은 정부가 ‘국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글로벌 코리아를 확립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한 한 해로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유치,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의 성공적 개최, 한·미 FTA 비준 등 커다란 외교적 성과들을 거두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고 주변국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그 결과, 두 차례의 비핵화 남북회담이 개최되었고, 이를 통해 북핵 문제 현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북한에 직접 전달함으로써 우리 정책에 대한 북한의 이해를 제고시키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연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이 증대되었고, 이에 정부는 미국, 중국 등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해 주변국과 활발한 정상외교를 추진하는 등 세계 각국과 협력 관계를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미국과는 이명박 대통령 국빈 방문 계기에 한·미 FTA가 미 의회에서 통과됨으로써 한·미 전략동맹의 범위가 기존 군사·안보 분야에서 경제 분



야를 아우르는 포괄적·다원적 동맹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중국과는 정상급 회담을 포함한 정부는 물론, 민간의 다차원적이고 진솔한 소통과 교류를 증진시킴으로써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였습니다. 일본과는 과거사 현안의 실질적 진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러시아와도 이명박 대통령 방문 등을 통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화하였습니다. 한편, 한·일·중 3국 협력사무국이 9월 서울에 설치되어 3국간 협력을 보다 제도화하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또한,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적극 전개한 결과, ASEAN이 우리의 2대 교역상대로 부상하는 등 신아시아외교가 내실화되었고, 유럽,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지역 국가들과도 정상방문을 포함한 활발한 고위급 인사교류를 통해 실질 협력관계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정부는 글로벌 코리아 실현을 위해 우리 위상에 걸맞은 국제사회에의 기여외교를 추진하였습니다.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유엔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핵

테러 없는 세상'이라는 국제사회 공통의 과제 달성을 목표로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2010 서울 G20 정상회의 후속과제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리더십을 발휘하였습니다. 11월에는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인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해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 창출과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글로벌 FTA 네트워크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갔습니다. EU, 페루와의 FTA가 발효되었고, 한·미 FTA가 양국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중국, 일본 등과의 FTA 추진 여건 조성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6월 서울에서 제1차 글로벌녹색성장서밋을 개최하고,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를 통해 개도국 녹색성장전략의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제적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11년은 또한 재외국민 보호 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 한 해였습니다. 정부는 1월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된 삼호 주얼리호 선원들을 안전하게 구출하였습니다. 또한, 2월 리비아 내전사태 발생시 약 2주일이라는 단기간 내에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하여 현지 체류 우리 국민 약 1,400여명을 안전하게 철수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3월 일본 지진·해일 사태시에도 피해교민 구조, 우리 국민 안전지역 이동조치, 구호품 지원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우리 국민의 활발한 해외진출 및 편리한 여행을 위하여 세계 각국과의 사증면제협정, 운전면허상호인정협정, 워킹홀리데이 협정 등 영사분야 협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격을 높이고, 세계와 소통하기 위해 한류 확산, 한식 행사 등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외교를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국가브랜드 제고에도 크게 기여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는 스포츠 외교에서의 민·관 협력의 좋은 사례로 꼽을 수 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21세기형 선진외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정예 외교관을 선발하고 양성하기 위하여 「국립외교원법」을 제정하였고, 「외무공무원법」을 개정하여 ‘공정·개방·경쟁’에 따른 인사를 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올해에도 글로벌 코리아 비전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국민과 함께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 성숙한 세계국가를 실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2012년 외교백서가 우리나라의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2012년 6월

외교통상부장관 김 성 환

# Contents

## 1. 2011년 국제 정세 및 외교정책 기조

제1절 국제 정세 개관 .....	10
제2절 외교정책 기조 .....	19

## 2.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제1절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 .....	26
제2절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한 여건 조성 .....	32
제3절 한·미 전략동맹의 심화·발전 .....	40
제4절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 심화 .....	48

## 3.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외교

제1절 신아시아 외교 .....	62
제2절 유럽 지역외교 .....	71
제3절 중남미 지역외교 .....	83
제4절 아프리카·중동 지역외교 .....	91
제5절 지역 간(inter-regional) 외교 .....	104

## 4. 경제·통상 외교 강화

제1절 G20 및 글로벌 경제거버넌스 강화외교 .....	116
제2절 글로벌 FTA 네트워크 확대 .....	125
제3절 에너지·자원협력 외교 .....	142
제4절 녹색성장 외교 .....	146
제5절 양자·다자 통상외교 .....	151
제6절 통상투자진흥외교 .....	177

## 5. 국제사회 내 역할 확대 및 위상 제고

제1절 세계평화 증진에 기여	186
제2절 개발협력을 통한 나눔과 기여 실천	211
제3절 소프트 파워를 활용한 공공외교 강화	228
제4절 대외관계의 법적 기반 확충	238

## 6. 영사 서비스 확충

제1절 재외국민 보호와 동포 권익 증진	246
제2절 해외진출 우리 국민 편익 증진	259
제3절 주요 외교사안에 대한 국민적 지지 확보	265

## 7. 선진외교 체제 구축

제1절 외교역량 강화	272
제2절 인사제도 개편	274
제3절 교육 및 평가제도의 내실화	277

##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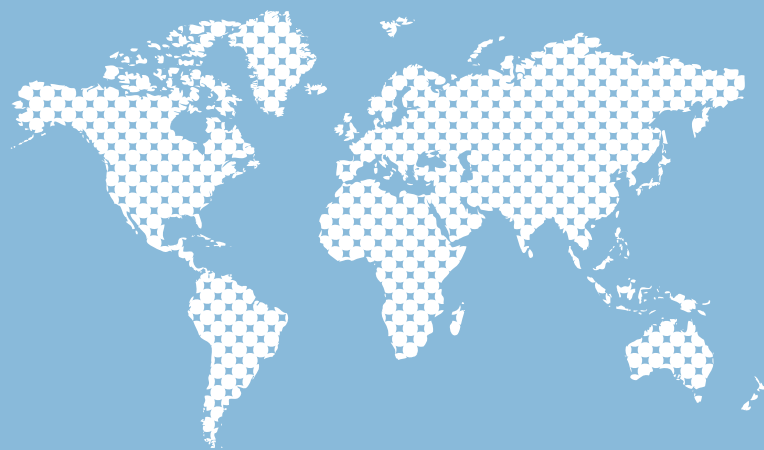
1. 외교통상부 조직도	282
2. 외교관계 수립 현황	284
3. 재외공관 현황	286
4. 국제기구 가입 현황	288
5. 경제통상 관계 현황	292
6. 2011년 조약 발효 현황	296
7. 비자면제협정 체결 현황	298
8. 재외동포 현황	300
9. 해외이주 현황	301
10. 여권발급 및 해외여행자 현황	302
11. 2011년 국제관계일지	303

2012

DIPLOMATIC

WHITE

PAPER



# 제 1 장

## 2011년 국제 정세 및 외교정책 기조

제1절 국제 정세 개관 .....	10
제2절 외교정책 기조 .....	19

## 제1절

# 국제 정세 개관

## 1. 국제 정치 정세

### 1) 개관

2011년은 불확실성과 더불어 유동성이 두드러진 한 해였다. 미국의 전세계적 영향력이 유지되는 가운데 중국의 부상, 유로존 재정위기 심화, 아랍 국가들의 민주화 운동 등이 국제 정세의 큰 주제였다.

2011년에도 이란과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지속되어 국제 안보를 위협하였으나,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핵 문제가 글로벌 이슈로 부각되면서 핵안보(nuclear security)와 핵안전(nuclear safety)이 연계 논의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기후·환경 분야에서는 2011년 11월 남아공 더반에서 개최된 제1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7)에서 선진국의 교토의정서 연장과 함께 2020년부터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 설립에 합의하는 '더반 플랫폼'을 채택하였다. 역사적 책임에 근거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한 유일한 국제규약인 교토의정서가 연장됨으로써 당분간 교토의정서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2011년 11월 부산에서 국제개발협력의 엑스포라고 할 수 있는 '세계개발원조총회'가 160여개국의 정부 대표, 70여개 국제기구 대표를 포함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총회에서는 모든 개발협력 주체와 방식을 포괄하는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을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2010년 G20 정상회의에서 ‘서울 개발 컨센서스’ 채택을 주도한데 이어 부산총회에서 새로운 개발협력 패러다임 형성을 선도함으로써, 그간 국제사회가 만든 규범을 수동적으로 따라가던 상황에서 벗어나 국제규범과 환경을 능동적으로 조성해 나가는 단계로 발전했다.

## 2) 지역별 동향

미국은 빈 라덴 사살, 이라크 및 아프간 전쟁의 부담 경감 등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지역 재관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역내 미국의 리더십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구체적으로 한·미동맹 등 양자동맹 심화,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역내 다자협의체(EAS·APEC·ASEAN 등) 참여 및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적극 추진 등의 정책을 복합적·중층적으로 전개해나갔다.

특히, 한·일·중 3국은 동일본 대지진 및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2011년 5월 2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4차 3국 정상회의에서 원자력안전과 재난관리 협력강화를 명기한 정상선언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2011년 9월 ‘3국 협력 사무국(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이 공식 출범함으로써 3국간 협력의 제도화 차원에서 진전을 이루었다.

동남아 지역에서는 태국·캄보디아 국경분쟁,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베트남 및 필리핀의 중국과의 긴장 상승 등 역내외의 갈등이 있었으나, 2011년 8월 태국의 정권교체 이후 태국·캄보디아 관계가 개선된 한편, 7월 ARF 외교장관회의에서 중국·ASEAN간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DOC: 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 가이드라인이 채택됨으로써 남중국해 문제의 평화적 해결 여건이 마련되었다.

한편, 2011년 11월 오바마 미 대통령의 호주 방문시 미·호주 양국은 미 해병대의 호주 주둔 및 미군의 호주 군사시설 사용 등을 골자로 하는 “미·호 군사태세구상(U.S.-Australia Force Posture Initiative)”을 발표하였다. 이는 미·호 동맹을 통해 아태지역 내 역할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하겠다는 미측의 전략을 시사하였다고 평가된다.

서남아 지역은 2011년 유럽발 재정위기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6.5%에 달하는 고

성장률을 바탕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또한 역내 평화와 안정에 있어서도 일부 진전이 있었는데, 영토, 테러문제로 지속적인 갈등관계에 있던 인도와 파키스탄이 2011년 3월 총리회담을 필두로 대화를 재개하였고, 스리랑카·네팔에서도 내전 직후 화해·재건사업이 꾸준히 진행되었다. 한편, 아프간에서는 2011년 7월에 국제안보지원군(ISAF)이 아프간 정부로 치안 책임 이양을 개시하여 아프간의 중·장기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초적 여건을 마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ATO군의 파키스탄 초소 오폭 이후 미·파 관계가 경색되고, 빈 라덴 사살 이후 반군세력의 테러 위협이 증가하는 등 치안여건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다.

유로존 재정위기는 2011년에도 지속되었다. 남유럽 각국 정부의 긴축정책으로 복지혜택이 축소되고 실업률이 증가되어 긴축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와 파업이 곳곳에서 발생하였다. 재정위기가 심각한 아일랜드,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에서는 정권이 교체되었고, 반EU 정서가 유럽 각국의 국내정치에서 주요 이슈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EU 회원국들은 EU 이사회와 EU 정상회의를 통해 재정위기 대상국들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과 EU 회원국들의 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위기 해결 노력을 전개하였다.

중남미 지역은 페루, 아르헨티나, 니카라과, 과테말라 대선 결과, 베네수엘라 주도의 반미 급진좌파 성향부터 시장경제와 경제성장을 중시하는 실용주의적 성향까지 다양한 이념적·정책적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중도 실용 노선으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9년 군부쿠데타를 일으켜 미주기구(OAS: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가 회원국 자격을 박탈한 온두라스는 셀라야 전 대통령의 국내 복귀를 계기로 2011년 6월 OAS 회원국 자격을 회복하여 역내 정치적 갈등이 해소되는 추세이다. 역내 정치·경제통합 노력도 활발히 모색되어 중남미의 역사·문화적 동질성을 매개로 기존 미주기구(OAS)와 차별화하여 미국과 캐나다가 제외된 최초의 중남미 국가간 공동체로서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국가공동체(CELAC: Community of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States)가 2011년 12월 공식출범하였다.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는 2010년 12월 튀니지의 ‘자스민 혁명’으로 시작된 민주화 바람이 이집트, 예멘, 리비아, 시리아 등으로 전파되면서 이른바 ‘아랍의 봄’이 도래하였다. 아랍의 봄은 튀니지의 제헌의회 출범, 이집트 무바라크 정권과 예멘 살레 정권의 퇴진, 리

비아의 카다피 축출 등의 결과를 통해 견고하게 유지되어 온 권위주의 체제의 변화와 붕괴를 야기하였다. 다만, 현재 새로 등장한 시민사회 및 정치세력의 경험 부족과 미약한 경제 환경으로 인해 민주주의의 성공적인 안착은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다.

이란 핵 개발 의혹과 관련,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무력공습 의지를 밝히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맞서는 등 긴장이 고조되기도 하였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협상은 별다른 진전이 없는 가운데, 2011년 9월 팔레스타인이 UN 회원국 가입을 시도하였으나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남수단 분리독립 국민투표결과에 따라 2011년 7월 남북수단이 분리되며 남수단이 독립국가로 성립하였으나, 이후 원유수입 배분 및 국경문제 등 현안을 둘러싸고 수단과 남수단간 분쟁이 지속·격화되었다.

## 2. 국제 경제 정세

### 1) 개관

2011년 세계 경제는 유로존 재정위기, 국제유가의 고공행진, 동일본 대지진 등으로 인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빠르게 둔화되었다. 전세계적으로는 약 4%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으나, 이는 선진국의 저조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약 9%대의 성장을 보이는 등 신흥국이 6%대의 비교적 견실한 성장세를 기록했기 때문이었다.

2011년 9월 높은 실업률과 빈부격차 심화, 금융기관의 비도덕성 등에 대중들의 불만이 분출되면서 미국에서는 반월가 시위가 발생하였고, 동 시위는 전 세계로 확산되어 자본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2010년 서울 회의 이후 국제경제금융 분야의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로서 위상을 더해가고 있는 G20 정상회의는 2011년 11월 프랑스 칸느에서 개최되어 유로존 재정위기 해결, 세계경제 성장 전략, 무역과 개발 등 주요 이슈를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결과를 토대로 정상선언문을 발표하고, 세계경제의 단기적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과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정책공조 조치를 담은 ‘칸느 액션플랜’을 채택하였다.

다자무역 부문에서는 2011년 12월 제8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보호주의를 배격하고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였으며, 러시아의 가입을 승인함으로써 WTO가 세계무역의 약 99%를 관장하게 되었다. 또한 2011년은 중국의 WTO 가입 10주년이 되는 해로서 WTO체제를 통한 대외개방과 무역 촉진, 통상규범 선진화 등의 성과가 집중 조명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한편 각국은 FTA를 통한 자유무역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한 바, 동아시아에서는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통해 역내 경제통합 가능성을 한층 높였고, 미국은 호주 및 일본을 아우르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논의하고 있으며 중미에서는 멕시코 등 6개국간 단일 FTA가 체결되기도 하였다.

## 2) 지역별 동향

미국은 2011년 하반기 이후 제조업 주도의 산업 생산 회복 및 고용상황 개선에 힘입어 4/4분기에 2.8%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완만한 성장세를 시현하였다. 또한,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과 함께 적극적 대외 무역정책을 통해 미국 경기회복을 도모하고자 TPP 체결 및 확대를 추진하였다.

2010년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2011년 9.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제12차 5개년 계획에 따라 인플레이션에 따른 ‘거품경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경제발전 방식을 기존의 수출 지향적·양적 성장에서 내수확대 및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차세대 정보기술, 신소재, 신에너지 자동차, 신에너지 등 ‘전략적 신흥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 중에 있다.

일본은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및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여파로 2011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0.9%)를 기록했다. 일본의 무역수지도 지진피해와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급감으로 31년 만에 적자로 전환되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디플레이션과 내수시장 축소, 정부재정 악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일본에서는 극복 방안의 하나로 소비세 인상에 대한 논의가 2009년 이래 계속되고 있다.

러시아 경제는 2011년도에도 4%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2010년도에 이어 성장 추세를 유지하였다. 대내적으로 경제위기 극복과 자원 의존 경제를 탈피하기 위한 경제

현대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였으며, 미국 및 유럽의 경제 침체라는 대외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높은 유가와 내수 증진에 힘입어 성장세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동남아에서는 2015년 ASEAN 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ASEAN 국가들이 2011년 11월 ASEAN 정상회의에서 역내포괄적경제파르너쉽(RCEP) 프레임워크에 합의함으로써 ASEAN 경제공동체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서남아 경제의 맹주인 인도는 유럽발 재정위기로 인한 국내경제 둔화세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인구, 자원, 탄탄한 내수시장 등 견실한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2011년에도 명목 GDP 1조 5천억달러(세계 9위), 성장률 6.5%의 고성장세를 달성하며 지역 경제의 회복을 주도하였다. 한편, 2011년 11월 인도정부의 유통 시장 개방 결정, 내전 이후 스리랑카·네팔 정치 안정화에 따라 해외자본 유입이 증가하였으며, 역내 유일 지역협의체인 SAARC를 중심으로 역내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는 등 지역 경제의 중·장기적 성장을 위한 여건도 마련되고 있다.

2010년 시작된 일부 유로존 국가의 재정위기는 2011년에도 지속되었다. 2011년 EU 경제는 1.5%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의 견조한 성장과 그리스, 포르투갈 등 재정위기 국가의 마이너스 성장이 공존했다. 2011년 12월 EU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유럽안정메커니즘(European Stability Mechanism) 등 재정위기 대응책을 2012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중남미 지역은 광물·식량 등 원자재 수출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해외직접투자(FDI)가 증가하여 2010년 6.1%, 2011년 4.3%의 성장률을 유지하였다. 역내 경제통합의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는데, 특히 멕시코는 2011년 10월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와 단일 FTA를 체결하였으며, 콜롬비아는 미국, 한국 등과 FTA를 비롯한 적극적인 통상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2011년 4월 멕시코·콜롬비아·페루·칠레 등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태평양연안 4국간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이 결성되고, 콜롬비아가 Look Asia 정책을 추진하는 등 중남미 국가들의 아태지역과의 경제·통상 협력 증진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한편, 세계 제6위의 경제대국에 등극한 브라질은 해외자본 유입으로 통화 가치가 급등한 가운데 자동차 등 각종 산업에 대해 보호무역조치를 강화하였다.

2011년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은 평균 3.5%의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석유수출국의 경제는 고유가 혜택에 힘입어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였으며 특히 GCC 국가들은 리비아의

감산에 따른 석유생산량 증가와 고유가를 기회로 2011년 하반기 8%대의 높은 성장률을 구가하였다. 반면 이집트, 레바논, 요르단 등 석유수입국들은 정치·사회적 불안정과 유럽 등 글로벌 경제악화 등의 요인으로 저조한 성장에 머물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2011년 5.1%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지난 10년간의 성장세를 이어나갔다. 이 지역 역시 정치적 리스크는 상존하나, 자원 개발과 해외 투자 유입의 지속적 확대, 높은 인구증가율과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시현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 3. 한반도 및 주변 정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프로세스는 2008년 검증 문제로 인해 교착 국면에 접어든 이후 정체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2009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2차 핵실험, 2010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행위로 인해 남북관계 및 북한 비핵화 논의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국가안보적인 요인과 국제비확산 측면에서의 북핵문제 해결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 2011년에도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 노력을 지속 추진하였다.

다만, 정부는 9.19 공동성명 채택 이후 2.13, 10.3 합의 등 후속조치 이행과정에서의 북한의 행태에 비추어 6자회담이 ‘대화를 위한 대화’가 되지 않으려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먼저 보여주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6자회담 재개 전 영변 우라늄 농축프로그램(UEP) 중단, IAEA 사찰단 복귀 등을 포함한 사전조치 이행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립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남북 대화를 시작으로 다양한 양자 및 다자 접촉 계기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여 6자회담으로 가는 사전여건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을 6자회담 참가국인 미·일·중·러와 공유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전개하였다.

2011년 7월 22일 발리에서 제1차 비핵화 남북회담이, 9월 21일 베이징에서 제2차 비핵화 남북회담이 개최되었다. 남북한은 두 차례의 6자회담 수석대표간 회담을 통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북한측 사전조치 이행 문제를 포함해 북한 비핵화 전반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2011년 7월과 10월에는 미·북 고위급 대화도 별도로 개최되어 양자 대화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 사전조치 확보 노력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가시적인 진전이 예상되던 비핵화 대화과정은 2011년 12월 1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이 발표됨에 따라 중단되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발표 직후 우리 정부 및 미·일·중·러 등 주요국은 정상 및 외교장관 간 외교채널을 통해 신속하고 긴밀한 협의를 갖고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북한은 2010년 9월 당대표자회를 통해 후계자로 이미 내정된 김정은을 김정일 위원장 사망 직후 ‘최고 영도자’,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하는 등 외견상 비교적 큰 혼란 없이 3대 세습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북한의 2011년 경제정책 핵심은 2012년 강성대국 원년준비 및 인민생활의 향상이었다. 이를 위해 북한은 경공업과 농업을 강조하면서 식량문제 해결, 기초공업부문 생산력 강화, 평양시 10만 세대 주택 건설 등을 추진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나진·황금평 공동개발 착공식,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법 제정 등을 통해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면서 국제적 고립 탈피와 경제난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미국은 2012년 대선을 앞둔 가운데, 일자리 창출 및 재정적자 감축 등 경제문제가 주요 국내정치 현안으로 부상하였으며, 특히 국가부채 상환선 조정, 고소득층 증세, 사회보장지출 삭감 관련 정책적 논쟁이 본격화되었다. 한편, 재정적자로 인한 국방비 감축 압박 상황 속에서도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 역할 유지 및 대한 방위 공약을 지속 천명하였다.

중국은 집권 2기(2007년-2012년) 후반부에 접어든 후진타오 주석 지도 체제가 국내 정치와 사회의 안정을 추구해 나가는 가운데, 2011년 3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인민정치협상회의)를 통해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통치체제 공고화, 민생안정, 중국현대화에 유리한 조화세계 건설 등 다양한 목표를 제시하였다. 2012년 가을 개최 예정인 18차 당대회를 앞두고 2011년 10월 개최된 17기 6중전회에서 차기 지도부 선발을 위한 공식 과정을 시작하였다. 중국은 동·남중국해 등 해양 문제, 미국의 對대만 무기 판매 결정 등으로 관련국들과의 긴장이 조성되기도 하였으나, 차기 지도부 교체에 필요한 안정적인 대내외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면서, 한반도를 비롯한 지역이슈를 관리하고 미·일·ASEAN 등 주요 국가들과의 협력적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일본은 2011년 3월 11일 동북지방에서 발생한 대지진·해일 사태 및 이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국가적 위기상황에 직면하였다. 조속한 대지진 피해 복구 및 부흥을 위한 ‘동일본대지진피해 부흥기본법안’이 2011년 6월 성립하였으나, 칸 내각의 지지율 하락은 이후에도 계속되어, 2011년 9월 노다 요시히코 재무대신을 총리로 하는 신내각이 출범하였다.

중국의 부상, 미일관계 복원, 주변국과의 영토문제 등 여러 외교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노다 내각은 동일본 대지진 피해 복구 및 후쿠시마 원전 사고 수습 등 시급한 국내 현안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외적으로는 미일동맹을 일본 외교안보의 기축으로 삼겠다는 칸 내각의 방침을 계승하면서, 2011년 11월 TPP 교섭에 참가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양자·다자 차원의 일미 협력 강화에 노력을 집중하였다.

러시아는 2011년 대내적으로 경제 현대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유라시아 경제연합 추진을 비롯한 대CIS 경제외교 강화, WTO 가입, 2013년 G20 정상회의 유치 등 다방면으로 양자·다자 외교 강화를 지속하였다. 한편 2011년 12월 총선에서는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의 의석이 감소하고 부정선거 규탄 및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였다.

## 제2절

## 외교정책 기조

2011년도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 지속,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동북아 질서 변화, 유로존 위기와 세계경제의 불안정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 및 외교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외교부는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안보 외교’, ‘글로벌코리아 심화 외교’ 및 ‘개방과 공정의 외교통상부 실현’을 핵심추진과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외교정책 기조하에서 다음과 같은 과제를 추진하는데에 중점을 두었다.

## 1. 안보를 튼튼히 하는 외교

우리의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 주변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하여,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였다. 미국과는 우리 대통령의 국빈방미, 한·미 FTA 비준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한 최상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였다. 중국, 일본, 러시아와는 정상회담을 포함한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하여 전략적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켰다. 한편,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의 진전을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입장에, 두 차례의 비핵화 남북회담을 비롯해 주변국과의 다양한 양자·다자 접촉 계기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였다. 미, 일 등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포괄적·장기적 전략을 협의, 공유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에 따른 한반도 정세 유동성의

급격한 증대에 대해 주변국들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다.

## 2. 국격을 높이는 외교

지난해에는 ASEAN+3 정상회담, 중앙아시아 정상 순방 등을 통해 신아시아 외교를 지속 공고화하였으며, EU와는 고위정치대화 개설, FTA 발효, 정상 유럽 순방 등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였다. 또한, 아중동 정상 순방 및 총리의 중남미 순방 등 신흥 경제권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광범위하게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개발주체 및 협력방식을 인정하는 ‘효과적 개발협력을 위한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도출에 기여함으로써 국제 개발협력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였다. 또한, 레바논 ‘동명부대’ 및 아이티 ‘단비부대’ 지속 파견 등 국제평화와 안정유지를 위한 유엔 PKO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PRT 활동을 통한 아프간 지원 및 소말리아 해적 퇴치 공조 등 국제협력에 동참하였다. G20 의장단으로서 개발, 무역, 녹색성장 등 우리 주도 과제를 이행 관리하고, 서울 G20 정상회의 후속과제를 충실히 이행하여 오면서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위상을 강화시켜 나갔다. 또한,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준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와 준비기획단(단장: 외교통상부장관)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역대 최대규모 회의인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준비를 충실히 진행시켰다.

## 3. 선진경제를 실현하는 외교

신흥시장 진출 확대를 위하여, 비즈니스 외교의 확대, 통상투자사절단 파견 및 재외 공관의 우리 농식품 홍보 사업을 폭넓게 전개하였으며, 주요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적극적 대응 노력을 경주하여 관세부담액을 경감시켰다. 남아공 및 인도와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여 원전수출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사우디, 알제리 등과 원자력협정 체결을 논의하였다. 또한, EU, 페루와의 FTA를 각각 발효시키고, 한·미 FTA의 조속한 발효를 추진하는 등

시에 호주, 콜롬비아 등과의 FTA 협상을 진전시켜 나가는 한편, 중국, 일본과의 FTA 추진 여건 조성에도 노력을 기울이는 등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갔다. DDA 협상 진전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지속 전개하여 다자통상체제 강화에도 기여하였다. 이와 함께,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사업',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제적으로 확산시켰다.

## 4. 국민을 섬기는 외교

삼호 주얼리호 구출, 중동 민주화 확산에 따른 이집트·리비아로부터의 우리 국민 긴급대피, 동일본 지진사태시 신속대응팀 현장 급파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였다. 24시간 영사콜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영사협력원 제도 및 위험지역 체류 국민을 위한 신속대응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전국민 대상 상시 홍보 및 해외여행자 대상 출국단계 홍보 등 해외안전여행 대국민 홍보를 확대하였다. 아울러, 236개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운영 등을 통해 국내외 우리 국민들이 신속하고도 편리하게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인도와의 사증 간소화, 일본과의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확대, 텍사스, 플로리다 등 미국내 여러 주들과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등 해외진출 우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였다. 또한 세계 각국 한인단체 웹사이트를 통합, 연계하고 사이버 한상 네트워크를 발전시키는 등 온라인 한민족 통합네트워크를 강화하였다. 재외공관에서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행정적인 준비와 홍보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 5. 공공외교 및 민간부문과의 협력 확대

재외공관과 우리 기업, NGO 등 민·관이 함께 하는 문화외교를 통해 국격을 높이고 세계와 소통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국가브랜드 제고에도 크게 기여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는 스포츠 외교에서의 민·관 협력의 좋은 사례로 꼽을 수 있다. 한

편, 외교환경 변화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외교 대사 임명, 공공외교 포럼 개최 등 공공외교 수행 역량을 강화해 나갔다. 아울러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SNS를 적극 활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외교활동의 효율성도 제고하였다. 본부와 재외공관의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재외공관·민간·재외동포를 디지털로 연결하는 「글로벌 디지털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 6. 21세기형 선진 외교체제 구축

개방과 공정의 외교통상부로 거듭나기 위해 21세기형 선진외교체제를 구축하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특채문제 등으로 인해 드러난 인사운영 및 제도상 문제점들을 적극 시정하기 위해 공정·개방·경쟁에 기반한 인사·조직 쇄신방안을 마련하고, ‘외무공무원법’ 개정 등을 통해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였다. 인사교류 및 민간 인사 영입을 확대하는 등 개방과 교류를 통한 외교경쟁력 강화를 추진하였다. 능력에 따른 공관장 임기의 탄력적 운용 및 공관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부적격자의 고위직 보임을 차단하는 역량평가제도를 실시하는 한편, 과장 직위에 대한 드래프트 제도 도입 등 경쟁 및 능력 본위의 인사를 통한 공정 외교통상부를 구현했다. 외교환경 변화에 따른 실·국간 업무 조정 및 조직 개편을 실시했고 신흥시장국 및 에너지·자원협력 외교 강화를 위한 공관을 신설하였다. 또한 이러한 인사쇄신과 함께 외교관 충원제도를 개편하여 정예 외교관 선발 및 양성을 위한 국립외교원 설립을 준비하였다.

